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과연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산재보험을 둘러싼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치료, 보상, 재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선보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가 신청을 해야 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따라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회보험이지만 산재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가 자신의 사고나 질병이 산재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 대부분을 사업주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노동조합 유무, 사업주의 태도 등에 따라 입증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사회보험이지만 산재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결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산재노동자는 산재 승인을 기다리면서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의 공상 처리 요구에 응하기도 한다. 2020년 산재 승인까지의 기간은 근로격계질환이 121.4일,

뇌심혈관계질환이 132.4일, 정신질환이 209.5일, 직업성 암이 334.5일에 이르렀다. 산재노동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도입된다면?

선보장 제도란 산재노동자가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사가 산재로 판단 및 분류하면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추후에 산재판정기구를 통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이미 선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노동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추후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사후 정산이 진행된다. 결국, 선보장 제도는 아주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건강보험이 선보장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산재보험이 선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선보장 제도가 도입되면, 앞서 살펴본 산재보험의 여러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산재노동자의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되므로, 산재노동자의 정보 부족,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미적용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산재노동자에서 산재판정기구로 넘어가므로, 산재노동자의 입증 능력 차이에 기인한 산재보험 적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산재 승인 전에도 보상이 이뤄지므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

많은 이들이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그 주된 이유로 사후에 불승인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 선보장 제도 운용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초과 적립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동 기금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책임준비금보다 무려 15조1,118억 원이 초과 적립되었다. 한편,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급여 회수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병수당제도 등 법제도 개선에 발맞추어, 보험급여 회수의 문제가 크지 않은 영역(승인율이 높은 사고 및 질병 영역)부터 선보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